

K-반도체 투톱, 주주환원 팔 걷어… 저평가 국면 해소 기대

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 소각
향후 환원규모 200조 이상 전망

삼성전자 환원방안 조만간 공개
배당 확대시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미국 장기 국채금리 급등에 흔들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주주환원을 앞세워 반등에 나섰다.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정된 데 이어 삼성전자도 100조원대 환원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내년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한 만큼 주주환원이 실제 재평가로 이어지려면 AI 투자와 메모리 호황의 지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보통주 2407만주를 40조43억원에 장내 매입해 전망 소각하기로 했다. 지난달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당시 발행한 신주 1779만주보다 많은 물량으로, 지분 희석 우려도 덜게 됐다.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주주환원 기준은 기존 '5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높였으며 추가 환원 방안은 오는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381.41포인트(5.89%) 오른 6852.58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6.43포인트(1.99%) 상승한 840.89 마감했다.

/뉴시스

증권가는 이번 결정을 AI 메모리 호황에서 확보한 현금창출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했다.

향후 환원 규모가 200조원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준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2025~2027년 FCF를 약 491조원으로 추산했다. 회사가 제시한 최소 환원율 50%를 적용하면 정책 기간 총주주환원 규모는 245조원 이상이다.

SK하이닉스의 발표 이후 시장의 관심

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규모와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특별배당을 포함한 올해 주주환원 방안을 이사회와 경영진이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여력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2024~2026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환원할 경우 특별배당 규모가 최소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유진투자증권도 올해 주주환원 여력

을 100조원 중반대로 전망했다.

환원 방식은 자사주 소각보다 현금배당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높아져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배당 확대가 삼성전자의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지수 반등을 주도하려면 고성장주뿐 아니라 고배당주로도 확실한 이미지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주환원 기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금리와 실적 전망의 불확실성을 넘어야 한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33%까지 오르면서 AI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삼성전자 주가는 금리 불안 속에 지난 18~19일 이틀간 9.84% 하락했다. 20일 9.70% 반등했지만 급락 전인 지난 14일 종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동원 KB증권 본부장은 최근 주가 하락을 펀더멘털 훼손보다 금리 불안에 따른 과민 반응으로 진단했다.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의 AI

투자금 회수 기간이 3년 이내로 짧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금리 상승이 곧바로 AI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적 전망의 변화도 변수다. 삼성전자의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달 말 549조913억원에서 이달 18일 544조6704억원으로 낮아졌다. SK하이닉스 전망치도 400조원을 밑도는 391조8203억원으로 내려왔다. 올해 들어 가파르게 높아지던 실적 눈높이가 처음으로 낮아진 것이다.

다만 아직 업황 하락을 뒷받침할 뚜렷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이후 D램익스체인지 반도체 현물가격지수(DXI)와 DDR5 현물가격은 각각 3.6%, 3.5% 상승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낮은 주가수익비율(PER)은 반도체 이익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낮아졌음을 시사하지만 아직 그 정도의 훼손 조짐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4배 PER이 과도한 할인인지는 주당순이익(EPS) 하향 조정이 주가에 반영될 수준까지 확인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국내 PE 투자건수 급감… AI·에너지 중심 대형 거래

(사모펀드)

상반기 투자 69건… 21분기 만에 최저
우량자산 중심으로 선별 투자 이어져

올해 상반기 국내 사모펀드(PE) 투자가 조달금리 상승과 인수합병(M&A) 시장 정체 등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투자 건수가 21분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지만,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대형 거래가 이어지면서 투자 규모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삼정KPMG가 20일 발간한 '글로벌 PE 투자 동향과 2026년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PE 투자 규모는 56억달러, 투자 건수는 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에 따른 에너지 리스크, 조달금리 상승, 국내 M&A 시장 정체, 국민연금의 신규 국내 PE 출자 중단 등이 투자 활동을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비핵심 자산 매각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 충분한 자

본력을 갖춘 글로벌 PE를 중심으로 국내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는 이어졌다.

삼정KPMG는 하반기 국민연금과 연기금·공제회 등 주요 출자자(LP)의 PEF 출자가 예정된 만큼 국내 PE 투자 활동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 고숙련 정밀 제조업과 K-뷰티·K-컬처 수출 기업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은 투자 건수보다 거래 규모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뚜렷했다. 상반기 글로벌 PE 투자액은 1조달러, 투자 건수는 9294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투자 실적인 2조3000억달러, 2만1646건과 비교하면 투자 속도는 다소 둔화했지만 유입된 자본은 과거 평균 대비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12개월 누적 투자액은 2조4000억달러에서 2조3000억달러로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투자 건수는 2만1060건에서 2만105건으로 감소하며 21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 범위를 넓히기보다 성장성과 투자 확신이 높은 자산을 골라 대규모 자금을 집행한 영향이다.

자금은 AI와 에너지 인프라, 산업 제조 분야에 집중됐다. 산업별 투자액은 기술·미디어·통신(TMT)이 3547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산업 제조가 1540억달러, 에너지·천연자원이 1492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에너지·천연자원 부문은 연말까지 사상 최대 투자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테크 전환에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더해지면서 에너지 인프라가 핵심 투자처로 부상했다.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소프트웨어 투자는 정체된 반면 센서·로보틱스·반도체 등 제조업과 연계된 하드웨어 분야로 자금이 이동했다.

지역별로는 미주가 5791억달러로 글로벌 투자를 주도했고 유럽·중동·아프리카(EMA)가 3432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상

반기 최대 거래는 KKR의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 출범과 관련한 100억달러 규모 투자였다. 유럽에서는 EQT의 영국 인터텍 그룹 비상장화 등 대형 거래가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투자액은 679억달러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회수 시장에서도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한 선별 기조가 나타났다. 상반기 글로벌 PE 회수 건수는 1315건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이었지만 회수액은 5700억달러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PE 운용사들이 보유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파이어 세일'을 피하고 원하는 기업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회수에 나선 결과다. 회수가 지연되면서 PE가 보유한 미회수 포트폴리오 기업도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

김진원 삼정KPMG 부대표는 "하반기 글로벌 PE 시장은 무리한 양적 팽창보다 에너지와 AI 인프라, 산업 제조 기반 하드웨어 등 투자 확신이 높은 핵심 분야의 대형 거래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연장

금감원 금융시스템 안정성 도모

금융감독원이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1년간 연장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을 내용 변경 없이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시행되어 오고 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CCP를 거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부도 위험 및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증거금)를 사전에 주고받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거래 시점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담보하는 '개시증거금'과 일일 가격 변동에 따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관리하는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시증거금 대상은 매년 3~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다. 전체 대상은 143개사로 전년 대비 5개사가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54개사로 가장 많고, 은행 35개사, 기타 금융사 30개사, 보험사 24개사 순이다. 중국은행, 유안타증권,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동양생명, 현대해상 등 7개사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으며,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은 요건 미달로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대상은 명목잔액 평균이 3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로, 전년보다 2개사 늘어난 총 165개사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63개사, 은행 39개사, 기타 금융사 33개사, 보험사 30개사로 집계됐다. 중국광대은행, ABL생명, SBI저축은행 등 4개사가 신규로 적용되며, 제외 기관은 개시증거금과 동일하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AI 기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감시체계 구축

감시업무에 생성형 AI·머신러닝 도입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자산 이상거래 탐지부터 심층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자동화한다. 24시간 거래되는 수천개 가상자산을 한정된 인력으로 감시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머신러닝을 시장감시 업무 전반에 도입했다.

금감원은 생성형 AI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접목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시장 감시 체계를 내부 인력으로 직접 설계·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새 감시 체계는 거래소에서 들어오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시세조종 의심 종목을 초기에 포착한다. 특정 시간대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매도하는 이른바 '경주마' 방식과 입출금이 제한된 종목의 가

격을 끌어올리는 '가두리' 방식 등 초단기 시세조종 유형을 구분해 적출한다.

생성형 AI는 해당 종목의 공시사항과 뉴스 등을 함께 분석해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한 원인을 파악한다. 전형적인 시세조종 양태가 나타나거나 뚜렷한 근거 없이 가격이 급등한 경우 금감원이 거래소에서 매매자료를 받아 조사 필요성을 검토한다.

가장·통정매매 탐지에는 벤포드 법칙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종목별 거래량 분포와 체결 강도 등을 분석해 정상적인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종목과 구간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인위적으로 거래량을